

## 12·3 비상계엄 후폭풍 ... “尹 탄핵” 열기 뜨겁다

광주·전남 곳곳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시장·군수협 성명 주말 5·18민주광장 대규모 집회 예고...대학가 시국선언도 잇따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광주·전남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면서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5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두 번째 ‘광주시민총괄기대회’를 개최했다.

86개 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비상행동은 전날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현 정부에 요구하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괄기대회는 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민주광장에서 이어진다. 전남 각지에서도 각종 집회가 진행됐다.

여수 신가부영 3차 삼거리, 나주 빛가람동 사학연금사거리, 장흥군청 앞, 구례경찰서 로터리, 순천 연향동, 목포 평화광장, 고흥읍 등에서 이날 오후 5시~7시까지 시민들이 모였다. 이에 앞서 비상행동은 4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반국가적 내란 세력에 부여자가 되는 것”이라며 “놀랍게도 국민의힘은 이 반역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서 대구북 광주전남총학생회 상임대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광주시민들은 국민의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옥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부부장은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 민생은 박살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호남에 더이상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붙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비상행동은 “사무실 안에 있는 당원이 있다면 나와서 해명해달라”고 외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이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 22개 시·군이 모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발표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민주주의는 수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이룩한 것”이라며 “다시는 무자하고 안하무인적인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소속 박홍을 목표시장장은 이 성명서에 연명하지 않았다.

광주 동·남·북구의회도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지역 역사학자 모임인 호남사학회는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은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못할 ‘위험 인물’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자신 하야가 최선이겠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대학가에서도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남대 제53대 총학생회 ‘HEY DAY’는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3일 기습적으로 자행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5·18 정신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광주에게 더 없이 큰 상처이자, 군부독재의 부당한 계엄령으로 인해 핍박받은 광주 시민들과 선배들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춘과 목숨을 바쳐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불의에 맞선 우리 선배님들의 유지와 가치를 다시 한번 받들겠다”며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남대 교수회도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교수협의회 조선태지회 소속 교수들도 성명서를 통해 “12월 3일 시도한 전위쿠데타는 1980년 5·18민주항쟁으로 이어진 전두환의 5·17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대 교수 119명도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이 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윤석열 탄핵 의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규탄하며 탄핵 의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연도 정성도 맛도 영양도 아낌없이 다 담은 전남쌀

넉넉한 평야에서 받은 햇볕 한가득 산과 바다를 훑고 지나온 청량한 바람과 일년 사계절 쉼 없이 돌본 농부의 지극 정성까지

전남쌀은 맛 좋은 밥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아낌없이 다 담았습니다

영양 가득 맛 좋은 전남쌀은 전남도장에서 jnmall.kr

## 윤 대통령 부부 운명 이르면 7일 결정 탄핵안 표결·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을 결정짓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이태블 표상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나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조정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

해야 한다. 범야권 의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표결 시점을 6일이 아닌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험적, 위협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거라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민이 밝은 올해의 좋은 정책 ▶6면  
복스 - '전리의 말들' '고흐, 신의 눈빛...' ▶14-15면  
여행 성지 전남 - 매력적인 전지훈연 명소 ▶22면